

북한 군부는 김정일 정권의 독(毒)인가 약(藥)인가?

정 영 태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지난 9월초부터 ‘김정일 와병설’이 제기된 이후 ‘김정일 유고시’ 북한체제의 향방과 관련 국내·외적으로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과연 북한군의 속성은 무엇이고, 김정일 정권 위기 시 북한군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북한이 현재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군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군대 중시와 강화, 그리고 ‘혁명의 기동’으로서의 군대역할 제고 등이 선군정치의 주요 내용이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군사적 리더십을 부각시킴으로써 군사적 정통성을 강화하는 한편, 군대의 충성심을 앞세워 군대 외에 사회전반까지 완전 장악함으로써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견고히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선군정치라는 것이 수직적 차원에서 군이 당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이 정치 사상적으로 군을 지도·통제해 나간다는 당의 ‘령군체계’에는 변함이 없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우리 정세가 복잡하고 인민군대 앞에 나선 임무가 무거울수록 당의 령군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여전히 당조직을 통하여 군이 독자세력 형성으로 당 정책지도노선을 위협하게 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군부를 정치 사상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군의 특수성을 제한적으로 용인하면서도 군을 당사업 즉, 정치사상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고 있다.

당과 군의 제도적 관계는 당이 ‘전체’ 라면 군은 그 ‘부분’이다. ‘전체’와 ‘부분’의 조화가 곧 당과 군의 일체관계이다. 북한에 있어서 당과 군의 일체라는 것은 수령과 군이 일체라는 뜻도 된다. 수령이 곧 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군이 ‘전체’ 즉 수령을 위한 정치적 혁명 활동(수령결사옹위)에 ‘혁명주체’ 세력으로서 맨 앞장에 서는 것이 바로 선군정치 하에서의 북한군대의 역할이다.

위와 같은 논리에 입각해 현재 북한의 선군정치가 당과 군의 관계를 갈등이 아닌 상호 융합 또는 일체적 관계로 심화시켜 나가는 데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과 군의 일체적 관계는 곧 수령 즉, 당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때, 당이 수령의 안위와 당 조직의 보호를 위하여 군을 동원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군대가 당의 부름에 따라 사회적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은 수령 즉, 당에 충성하는 행위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당-군간 일체적 구조는 ‘북한군대의 정치적 동원 → 군의 ‘반당’ 정치개입 범위 확대 → 체제 도전적 군부 쿠데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오히려 당의 영도체계 자체가 위협 받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당 즉, 수령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부는 친위 쿠데타조차 감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와병설’ 이후 제기되고 있는 ‘김정일 이후체제’와 관련, 3대 권력세습을 가장 옹호하고 후원하는 세력 역시 북한 군부가 될 것이다. 북한 군부는 앞장서서 김정일 부자 권력 승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정치 체계를 지속시키고자 할 것이다.

김정일은 집권 초기 경제난으로 인하여 당의 지도와 통제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당의 영도체계 회복과 사회적 혼란의 원천적 봉쇄를 위해 군대를 대대적으로 동원하였다. 김정일은 군부를 동원하여 당 조직지도부도 검열하고 당 고위 간부들을 철직시키는 등 일련의 당 정화작업을 군이 직접 개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김정일이 이미 스스로 당과 체제의 안전 회복을 위하여 군대를 전면 동원함으로써 당(수령)을 위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

김정일은 1998년 이후 국방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당과 국가, 사회의 전 부문을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김정일은 ‘당중심, 군우선’이라는 선군정치를 제도화하였다. 선군정치를 통해 김정일은 경제난으로 붕괴될 위기에 처했던 당의 영도체계를 회복시켜 그의 권력승계 체제를 안정화하는 데 일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선군통치 체제’가 언제까지 김정일 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효율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완고한 태세를 견지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확대될 수 있어 북한의 경제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에 빠지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경제난 심화는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당적 지도를 또다시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난 심화는 인민군대의 생활을 악화시켜 인민군대의 이탈현상을 확산시키게 될 것이고 이는 자연히 인민대중의 재산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군과 당, 군과 민(인민대중)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이 핵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대북 제재 강화를 유발하고 이것이 경제난 악화로 이어져 군대에 까지 여파가 미칠 경우 군대의 사회적 이탈행위의 증가 → 인민대중의 불만 확대 → 군과 인민대중(민)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 군대는 김정일 정권의 보약(補藥)이 아니라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독(毒)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